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인가: 정책현장에서 바라보다

박이은희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과정 수료

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공무원 단체 조직에서 활동가로 일한 경력이 있다. 2012년,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여성학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300명 정도가 일하는 한 중앙부처 소속 기관에서 2019년부터 '성평등 정책 담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동시대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이지만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지식과 규범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기도 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속한 세계는 지난 몇 년 사이 몸담고 있던 공간과는, 판이하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관계와 연결성, 문화를 분석하고 살피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페미니즘이 체현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인가'라는 문장이 질문인지 의제인지 금방 정리되지 않았다.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는 '당연하지'라고 답할 것 같았고, 어떤 이는 '한줌 페미니스트들의 지향이나 욕망의 소산이겠지'라고 답할 것 같았다. 또 다른 쪽에서

는 '페미니즘? 헐~ 헐~ 페미니즘이라니...'라고 도끼눈을 뜨고,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리 끝에 같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졌다. 감정과 직관은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오갔다. 유사 이래 여성의 역사, 이론, 행동주의로서 페미니즘과 같은 거대 서사의 언어들이 거칠게 지나갔다. 한편, 내가 살아내야 했던 일상과 많은 사건의 구체적인 얼굴과 이름들이 떠오르는 순간, 세계를 인식하는 나의 판단의 준거가 다시 주류 지식 생산 체계와 규범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백수이면서 박사수료생이던 1년 전 나와 현재 공공기관의 페모크라트(페미니스트 관료)를 자처하는 나의 대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이 다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공존한다. 여성학을 전공하고, 나와 같은 현장에서 성평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조직에서 성평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세 가지 다른 세계

필자의 이력을 글머리에 쓴 이유는, 2019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문득 현재까지 세 가지 다른 세계를 살았고,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 가지 다른 세계는 페미니즘을 알았을 때와 그 이전으로 나뉜다.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공무원 소속 단체의 여성위원회, 성평등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 둘러싸여 여성주의 공부와 활동은 변죽도 울려 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소수자(minority)로서 ‘여성’과 젠더 폭력에 관한 제한적인 언어 외 다른 언어가 없었다.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와 사람들도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말 자체를 낯설어했고 해괴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여겼다.

해괴하고 이질적인 것, 페미니즘

갈급한 심정으로 여성주의 언어를 찾아 나섰다. 여성학이라는 학문의 공간에 있었던 7년간은 행복했다.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학문적 글쓰기와 같은 기본 소양을 몸에 익히느라 고된 시간이었으나 철학, 섹슈얼리티, 노동, 역사, 문화, 가족 등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페미니즘의 언어와 만나

부서지고 전복되고 경계를 넘나들었다. 나를 비롯해 주변 동료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부대끼는 마음, 예민함과 까다로움이 공부와 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자 방법이 되었다. 돌이켜보건데 읽고 논쟁하는 텍스트는 물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태도(attitude)와 일상적인 삶의 방식, 고민들이 훨씬 더 좋은 텍스트였다. 학문 공동체는 예민한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안온했다.

2015년, 현장¹⁾과 이론을 다루는 여성주의 활동 공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여성혐오’였다. ‘메갈리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시작된 2015년에 만들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메르스 국면에서 집중되고 노골화 된 ‘여성혐오’의 언어가 메갈리아의 태동기반이다. 메갈리아는 물방울이 튀기어 퍼지듯, 압력을 가득 받은 용수철이 솟구치듯 경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메갈의 출현 이전 된장녀, 김치녀, 김여사와 같은 폭력적인 혐오 발화의 표적이 된 여성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넘기는 척하거나 바들바들 떨면서 ‘개념녀’임을 증명해야 했다. 많은 미디어 채널의 개그 프로그램과 인기 드라마가 혐오 표현들을 재현하고 확장시켰다. 혐오의 언설은, 우리의 일상에, 무겁거나 비장하거나 진지한 것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누구나 장착해야 마땅할 듯한 ‘매너’이자 트렌디한 개그 코드로, 거부감 없이, 가볍고 깊게 안착한다. 사이버와 일상의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사이버에서 태동한 혐오 언설은 일상의 규율로 작동한다. 메갈 출현 전까지 적어도 많은 ‘여성’들이 무개념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된장녀, 김치녀를 타자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여

1) 여성주의의 현장은 정부기관에서 여성주의 학문·연구, 활동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현장’은 내용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단위업무로서 여성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정부 소속 하급 기관을 의미한다.

성 혐오의 공격은 한 여성의 몸을 두고 순간에 따라 가치를 전도시키는 규율 방식이자 여성에게 가중되는 이분법적 통제 규범이다. 응전(應戰)이므로 선제 공격이 없다면 전투도 없다. 메갈리아의 대중적 파급력을 실감케 하는 것은 여성 혐오에 대한 성찰적이고 윤리적인 논쟁의 촉발이 아니라 메갈의 응전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이다. 공격의 질문이 ‘김치녀냐?’에서 ‘메갈이냐?’로 옮겨 간 것이다. 이후 강남역 살해 사건, 촛불정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의 활약, 미투 운동과 낙태죄 위헌 판결이 이어졌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좌와 학회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페미니즘 저작 출판이 200% 이상 늘었다는 기사가 포털 뉴스가 되고, 연말 TV 연예 대상 프로그램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여자 개그우먼들이 줄줄이 호명되었다. 2020년은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포비아의 문제, 공영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의 여성 사회자 교체가 젠더 이슈로 떠올랐다. 이제 드라마에서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레 등장하는 장면은 더 이상 ‘사건’이 되지 않는다.

사석에서 만난, 평생을 페미니즘에 헌신해 온 한 교수는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서 이런 세상을 보는구나”라며 소회를 내비쳤다.

살아서 이런 세상을 보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전 세계적 이슈인 시기에 ‘메르스’가 다시 소환되는 걸 보며 메갈리아의 등장을 떠올렸다. ‘살아서 이런 세상을 본다’는 사회 혹은 지난 몇 년의 시간에 대해 소감과 사건을 이야

기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배경으로 하는 글에서는 조심스럽다. 페미니즘 분투의 역사를 의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한 여자 검사의 용기로부터 촉발되었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의 노력과 투쟁의 역사를 삭제하는 서술이다. 2018년 초반 미투가 미디어의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기 이전인 2016년부터 ‘해시태그 00계 성폭력 말하기’ 물결이 일어났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일터와 실명을 공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문단계로 시작했던 이 해시태그 운동은 차차 출판계, 영화계, 사회운동계, 학교 등으로 광범위하게 번져 나갔다. 주요 해시태그를 분석했던 신문기사에 의하면 ‘#00계’의 항목이 20개에 육박한다고 보고 한다²⁾. 2016년 이전과 그 이전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반성폭력을 비롯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도전해 온 이론과 행동의 역사가 존재한다.

여성(주의) 정책의 현장, 여성주의의 물결이 무색해지던 순간

일반적으로 여성정책(women's policy)과 여성주의 정책(feminist policy)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Mazur, 2002: 29-31).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여성주의(feminism) 정책은 성별 이분법과 위계의 조정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

2019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중앙행정기관은 성평등 정책 부서를 신설 또는 재설치했고 그에

2) 이유진 · 노형석 · 최재봉 기자, “침묵 없겠다”... ‘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 확장, 2016.10.30, 한겨레

따른 인력을 충원했다. 미투운동은 한국사회 젠더 관계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정책 현장은 지난 몇 년간 내가 보고 마주했던 여성주의의 물결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질문해야 하는, 나의 기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내 주변에서 차고 넘치던 젠더 이슈들이 이곳에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주제였다.

공공 행정의 언어들은 지시적이고, 쉽고, 일관되지만 페미니즘의 언어는 복잡하고 맥락적이다

한국 여성정책이 패러다임적 전환을 모색한 것 중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정책으로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전격적 도입이다.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은 간단히 말하자면 ‘여성’ 대상 정책에서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표방한다. 1995년으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현재, 한국 여성정책의 성평등 패러다임적 전환은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젠더(gender)’는 페미니즘이 발견한 대표적 언어다. 성별의 사회적 관계와 구성, 제도, 의미 등을 분석하는 개념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지속하는 용어인데, 연구자나 학문의 성격에 따라 저마다 사용례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영어의 번역어인 동시에 이론적이고 맥락적인 말로서, 직관적이고 일관된 기존 행정 용어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정 현장에서 사용을 시작하던 때부터 용어 이해의 어려움과 불명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생산, 노동 등 여타 추상

적 개념들이 그러하듯 젠더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정 현장의 복잡성과 버무러지면서 일정한 의미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젠더’는 행정 분야에서 이러한 의미망을 만들어 내는데 일정 한계를 노정했다고 본다.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배경에 있었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성평등(gender equality)과 성인지(gender sensitive), 즉 젠더를 번역하고 있는 가장 흔한 언어는 ‘양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은 정책적 지향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인 동시에 평등을 달성해야 하는 범주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공공 행정의 언어들은 지시적이고, 쉽고, 일관되지만 페미니즘의 언어는 복잡하고 맥락적이다. 젠더는 성별의 사회 구성적 성격과 변화의 역동성을 담고 있는 여성주의(feminism) 언어다. 그런데 여성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젠더는 ‘남녀’의 영어 번역어 정도로 이해된다. 젠더는 계속해서 오역되고 있는 중이다. 성인지(gender sensitive)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공문 안에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모든 면에서 대등하고 대칭적이라는 착각을 현실화시킨다(정희진, 2017: 8).

계획·정책에 성평등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 8개의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내에 성평등 정책관실을 설치했다. 4급 정책관과 여성주의 관련 전문 경력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등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

다. 여성주의 정책 전담부서의 시스템화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어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뒤를 이었으며 확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별도의 성평등 전담 부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부서 내에 성주류화 업무 담당자 한 명을 임용하는 것에 그친다.

성주류화는 말 그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책에 필터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장착시키겠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2019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평등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찰 정책 전반에서 범분야 이슈로 인식·적용되도록” 한다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다. 경찰청은 2018년 각각 4, 5급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경찰청에 임용한 이래 2019년 각 지방청과 부속기관에 성평등 직무 담당자들을 임용했다. 2년 남짓한 사이에 전담부서와 전 지방의 소속 기관을 아우르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5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경우 5대 대과제, 16개 중과제, 57개 소과제가 기본계획의 구조다. 상급 단위 기관의 정책 목표와 과제는 포괄적인 수준이어서 여성주의 정책이 범정부 혹은 소속 기관의 정책 전 분야를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급단위의 과제들이 부처별(부서별)로 세분화 되고, 귀속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나 중앙 조직 이하 기관의 업무는 단위업무 정도로 양상해지게 된다.

시행되는 여성주의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구체성에 기대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지 관점

을 범 분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정책의 대상과 내용, 실행 방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직무 칸막이를 열 수 있어야 그로부터 젠더 이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실무단위 여성주의 정책 담당자는 타 부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때문에, 그로부터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젠더 이슈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교적 좋은 조건에 있다. 정책 수행의 방법이 주로 하향식인 점이 아쉬운 지점이다. 정책의 기획과정과 시행 중인 정책의 변화과정에 현장 단위 실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

높은 직급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책 현장에서 입안되는 많은 계획과 정책에 성평등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개입할 여지, 경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무슨... 우리 강의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페미니즘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단어이면서 개념의 스펙트럼 차이가 큰 언어가 또 있을까. 한 예로 페미니즘 사전에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증후군’이 등재되어 있다. 여성주의적 사유와 행위를 실천하면서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명명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페미니즘은 여성주의 정책 매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의 배경 혹은 밑바탕이 된다.

일을 시작하고 놀라웠던 두 번의 순간이 있다. 하나는 폭력예방교육 통합강사이면서 신입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과목을 강의하는 한 강사의 사례다.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성주의와 페미니즘

으로 대화가 이어질 무렵 “페미니즘은 무슨... 우리 강의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라고 말을 끊은 순간이 그 처음이고, 두 번째는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 페미니즘의 복잡성과 맥락을 설명하던 순간이다. 부기관장 정도의 계급적 서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나오자 곧바로 나의 설명을 중단시키고는, 성평등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정의 내리면서(그야말로 맨스플레인을 시연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 있다 보면 성평등 정책이 일차원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성평등 정책=성희롱 예방’ 혹은 ‘성평등 정책=여성’이라는 식이다. ‘페미니즘’에 관한 한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에 대해 사람들은 또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설사 페미니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에도 단편적인 이해를 전부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성애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성 정책은 오로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식한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인권정책과 여성정책은 전혀 다른 정책 범주다.

성평등 정책 수행의 방향감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투쟁(struggle)이다. 페미니즘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여성들이나 특정한 인종 또는 특정 계급의 여성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있지 않다. 또한 남성들에 우선하여 여성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bell hooks, 1984).

여성 살해(femicide)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

별의 구조가 여전한 현재, 페미니즘은 지금 당면한 ‘여성 문제’를 푸는 열쇠여야 한다는 입장과 범주의 확장을 주장하는 논쟁이 ‘여성’ 내부에 존재한다. 이재경(2012)은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나 실체를 가진 것이기보다는 다양한 갈래의 이념적 토대와 관점을 견지하는 사상, 이론, 행동주의(또는 운동)로 구성된 묶음들이다”라고 정의 내린다. 명쾌한 몇 개의 언어로 페미니즘을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가진 덕목이다. 그러나 차별, 배제, 억압에 대한 예민함은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세계를 위한 최소 감각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숙명여대 트랜스 젠더 입학 논쟁 사태와 같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숙명여대 사태는 페미니즘의 지향을 놓고 별도의 해석과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자의적 오역 때문에 여러 정치적 경합의 무대이기도 한 행정 부문에서 ‘페미니즘’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 ‘성인지’와 ‘양성평등’이 한 공문서에 공존하는 형국이 황당하기도 비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막 페모크라트를 자처하는 이들이 행정, 정책의 분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의 언어가 행정의 언어와 만나면 어떻게 변태할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치의 장 속에서 어떤 색으로 변화할 것인가. 차별, 차이, 억압에 대한 페미니즘의 감각을 어떻게 나의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성평등 정책 담당자로서 나는 다만 당면한 일을 할 뿐이라고 다독이고 있는 중이다.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인가’라는 질문을 같은 현장의 동료 5명에게 건넸다. 아래의 글은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동안 현장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회를, 사례의 형식을 빌려 옮긴 것이다.

〈표 1〉 성평등정책 담당자 사례 내역

구 분	근무지 및 근무연수
사례A	중앙부처 소속기관(광역) 1년
사례B	기초자치 단체 5년
사례C	기초자치 단체 3년
사례D	중앙부처(6개월)
사례E	중앙부처 소속기관(광역) 1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젠더기반 폭력에 머물러 있어요. 폭력예방교육, 중요하지만 그게 여성주의 정책의 전부인 느낌이 있죠. 젠더 문제가 폭력예방교육으로 한정되는 느낌. 젠더 거버넌스만 해도 여성안전 대책 협의회라고 소속 기관에 젠더 거버넌스 성격의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조정하는 역할은커녕 그 회의에 참석도 못 해요(사례A)”.

“들어가고 나서야 안 거지만, 내가 필요해서 뽑은 것이 아니더라구.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친화도시 업무가 전적으로 맡겨지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여성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흐름, ‘우리는 선도적으로 이런 전문가를 뽑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과시하는 게 중심이었던 거지. 양성평등이라는 말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수십 번을 포기하고 싶더라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바꿀 수 없다는 생각, 혼자서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 아무도 관심이 없어. 가장 침예하게 대립하는 순간은 내 정책 제안으로 업무가 늘어나느냐 아니냐 하는 순간이지(사례C)”.

“담론적 주류는 아닌 거 같아요. 옛날이랑 좀 다르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는 것 같은데. 새롭기는 하지만 주류적 가치는 아닌.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본다면 올드한 느낌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차를 더

구분하고 ‘섹스는 두 개다’라고 퇴화하는 느낌이랄까? 페미니즘의 언어를 행정 조직에 맞게 과감하게 번역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방향과 지향이 없으니까. 아니, 모호할 때는 차라리 더듬거리며 방향을 찾기도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성평등, 젠더 등 페미니즘 언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너무나 난무하는 거죠(사례B)”.

“여기(중앙행정기관)로 오니까 정말 정책하는 맛은 나는 거 같아. 우리 부처 전체 업무를 알아야 해서 초반에 공부의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거기서 젠더 이슈를 찾고 통계를 대비시켜서 정책화해내는 일을 해요. 아, 내가 정말 전문가답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 문제는 부처 시스템 속에 담당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열려 있는 구조냐는 건데 이게 케바케(case by case)야. 다른 부처에 함께 임용된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상사를 잘 만났다, 운이 좋다고 여기는 거지(사례D)”.

“성차별도 인권침해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들짝 놀라더라구요. 인권과 여성정책을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요. 왜 여성정책 담당자가 인권얘기를 하느냐고요...이제 시작이죠. 이제 겨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동등권 논의가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여성대표성을 이야기하고,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사회 전체가 나아가는 것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도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앙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정책에 개입할 여지를 갖도록 여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형사과에 여경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좀 그렇고 조금 더 있어 봅시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다 알고, 여경들이 형사업무 할 수 있는 거다 아는데, 귀찮다는 거죠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하는 게. 조직이 함께 고민하지 않고, 혼자서는 못합니다. 지금은 뭐랄까 좀 많이 궁색해요(사례E)”.

• 참고문헌 •

- 강준만. 2018,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한국여성의 인권 투쟁사』, 인물과 사상
- 경찰청. 2018,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19)」
- 경찰청. 2019,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신경아. 2016, “여성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제32권 4호 1-36.
-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이재경·김경희. 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제 28권 3호 1-33.
- 이재경 외. 2011, 『여성학』, 미래인
- 정희진 엮음.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 정희진 엮음. 2019,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 이유진·노형석·최재봉 기자, “침묵 않겠다”...‘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 확장, 2016.10.30, 한겨레